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연구

이 창 원*

국문요약

최근 복지 수요 증가, 고용서비스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존 낮은 재정자립도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학계, 연구기관, 전·현직 담당 공무원 등 공유재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자원 관리기금 신설 조례 마련(0.123), 공유재산 관리 운영성과 시스템 도입(0.111), 정기적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 과다 문제 해결(0.111), 관리위탁기관 선정(0.111), 인력 규모 확대 및 전문성 확보(0.097)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전담 기구 확대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과는 우선순위에서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행정재산,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AHP분석, 다기준의사결정

I. 서론

지방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면서 복지 수요 증가, 고용서비스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가를 요구받고 있으며,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여효성·김봉균, 2019).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의하면 2017년 53.4%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49.9%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 19에 의한 지원금 확대와 사회복지 관련 예산 증가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출 증가에 따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더불어 재정 확보 차원에서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수익 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한 효과적 이용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류장권·윤형석·이춘원, 2018).

과거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의 관리·활용 관련 연구들(강황목·남창우, 2019; 김성찬, 2018; 김종갑, 2015; 김학수·서충원, 2018; 라휘문, 2020; 조임권, 2018)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 우석대학교창업교육지원센터장

중앙정부의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의 관리·활용 측면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의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전환 시켜 기존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의 유지·보존에서 활용하거나 수익 발생을 통한 재정 확보와 재정건전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남창우·강황목, 2019). 그러나 중앙정부의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도입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의 활용 및 수익 발생을 통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방향성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및 행정자산 관리에 대한 연구 또한 공유재산관리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집행 역량 부족과 손실을 무릅쓴 매각 등 관리 정책의 문제(고경훈, 2015), 관리체계의 제도적 변천 과정과 법체계의 개선 방안(김종갑, 2015), 전담 관리조직과 위원회 등 행정조직의 문제(곽태열, 2013; 전영길·이무영, 2020), 위탁 방식 도입 관련 방안(김성찬, 2017), 정보 관리체계 미흡(이삼주·김성찬, 2017) 등 법률체계 또는 관리조직 개편,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과 법적 개선 등에 대한 관리 체계에 대한 단편적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특별자치도 확대 및 2009년부터 일반재산에 대한 신탁제도의 본격적인 도입 등 행정재산의 활용성 확대와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방안 모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익 확대 및 이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존 연구들과 같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익 확보와 이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영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사적자원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행정재산 관리와 이용을 위한 수익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인적자산, 정보시스템 자산, 관리시스템 등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 선행 연구들을 4가지 관점으로 범주화하였으며, 범주화된 요인들의 중요도 평가에 자주 사용되는 AHP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의 수익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요도를 도출하여 정책에 도입할 수 있는 다면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유재산과 행정자산의 활용·수익 창출 방안에서 중요시되는 요인들을 2024년 특별자치도가 되고 재정자립도가 타지역보다 낮은 전라북도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마련·개선, 인적자산, 공유재산 관리·운영 문제 개선 등으로 크게 범주화 하였으며, 각 범주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고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공유재산과 행정재산의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 발생 방안과 기존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도입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변화되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행정재산 관리 및 효과적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행정재산 개념과 선행연구

1) 공유재산 개념과 기능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지만(류충호, 2010) 일반적으로 3가지의 개념적 범위를 지닌다. 광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현금 이외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물건 및 권리이며(박우서·고석찬·박경원, 1996), 중의 개념은 사용 목적으로 결합된 수익적 가치의 총체(박우서·고석찬·박경원, 1996)이고, 협의 개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해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항공기, 기계·기구, 유가증권, 무체재산, 용역물건 등으로 한정(이삼주·김성주, 2015) 한다.

이러한 3가지 개념적 범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2022)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공유재산 범위는 물건과 권리로 구분하고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권리는 용역물건, 무체재산권, 유가증권, 수익권으로 구분하는 협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진행도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이러한 공유재산은 헌법(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제142조 제1항 및 제3항), 공유재산법에 의한 공유재산 등 관련 법적 근거를 통해 행사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은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공익성 실현을 위한 공공재로서의 기능 및 사경제의 주체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데 수익재로서의 기능(김중갑, 2015)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이다.

2) 행정재산 개념과 기능

공유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하지 못하며,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에 의해 행정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다(행정안전부, 2022). 일반적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2). 또한 법령, 조례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재산은 관리적 측면, 활용 측면, 재산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현행 공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핵심 기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삼주·김성주, 2017)

3) 행정재산 유형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행정안전부, 2022). 공용재산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청사, 박물관, 도서관 등이고, 공공용 재산은 공공용 사용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한 재산으로 도로, 하천, 제방, 항만 등이며, 기업용재산은 직접 경영 기업 또는 직접 경영 기업 종사자의 거주용 재산으로 상하수도, 건설 중인 지하철, 공영 개발사업 등이 속하며, 보존용재산은 법령·조례·규칙에 근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문화재, 사적지,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22).

행정재산의 관리는 행정자산의 취득·운영·유지·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곽태열, 2013) 경제·행정·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장현영·노시평, 2003).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표 1 참조). 이러한 관리방식으로 인해 행정재산의 경우는 관리위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재산의 경우는 개발이 중요한 관리방식이 되고있는 상황이고(이삼주·김성주, 2015), 이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4) 행정재산 선행연구

행정재산 관리제도 관련 기존 연구들은 전반적 제도 개선 연구(고경훈, 2015.; 김종갑, 2015; 이삼주·김성찬, 2017), 특정 지방자치단체 문제점 개선 방향 연구(곽태열, 2013; 박충훈, 2017; 조계근, 2012), 관리전담부서 및 인력, 관리 위원회 등 조직과 인력 운영에 관한 연구(고경수, 2020; 라휘문 2020; 전영길·이무영, 2020; 조임곤, 2018),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률체계 개편과 개발 방식에 관한 연구(고경훈, 2015; 김학수·서충원, 2018; 전영길 외, 2018; 차상휘, 2017), 데이터베이스 구축·전산화 및 거버넌스 구축·운영에 관한 연구(이삼주·김성주, 2015; 정성호, 2014), 관리방식 특히 위탁개발에 관한 연구(김성찬, 2018; 남창우, 2018; 이삼주·김성찬, 2017)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행정재산 관련 선행연구들은 크게 법·제도 개선 관련 연구, 정보시스템 마련·개선 관련 연구, 인적자산 관련 연구, 공유재산 관리·운영 문제 개선 등 4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 연구들이 단편적 시각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각 분야별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우선순위 관련 연구들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기반으로 4가지 범주내 주요 요인들을 선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표 1〉 행정재산 관리 유형

구분기준	방식	정의
주체	직접관리	소유자에 의해 직접 관리되는 방식
	위탁관리	관리전문가 또는 관리 기술자를 통해 위탁관리되는 방식
	혼합관리	일부는 소유자가 전문적·기술적 측면은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
방식	위탁관리	관리와 처분 중심을 목적으로 함
	개발관리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함
유지여부	관리	소유권 보존을 목적으로 함
	처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함

자료원 : 행정안전부(2022), 공유재산관리업무 편람

2.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산 관리 효율성 증대방안에 대한 공유자산과 행정자산 전문가의 우선순위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해 다기준의사결정(multicriteria a decision making: MCDM) 방법 중 주로 사용되는 계층분석과정(AHP)을 사용하였다(안정임 외, 2018).

계층분석과정(AHP)은 1972년 Saaty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의 비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기업·사회 특정 요인 중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김종철·고영희, 2020; Saaty, 1980). 조근태·조용근·강현수(2003)는 AHP의 이론 단순성, 적용 간편성과 범용성의 특성으로 여러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으며, 이론 구조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AHP 분석은 몇 가지의 공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김병욱, 2015; Vargas, 1990). 즉 효과적인 인간 사고는 계층적 구조를 지닌다는(hierarchy structuring) 원리, 의사결정은 동일한 것이 아닌 상대적 중요도가 있다(weighting)는 원리,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사고는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이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시작한다(조근태·조용근·강현수, 2003). 이러한 AHP 분석은 다수 평가 요인을 계층화하고 각각의 평가 요인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시킨 데이터를 고유방법(eigenvalue method)을 통해 상대적 가중치(relative weights)를 산출하며(Saaty, 1977; Zeleny, 1982), 9점 척도(9-Point Scale)로 중요도를 부여한다(Min, 1996). 따라서 각 요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도출하고 전문가 대상 조사,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적은 양의 표본을 통한 신뢰성과 전문성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최민철, 2020).

〈표 2〉 9점 척도(Min, 1996)

척도	정의	내용
1	동등	해당 문제에 대한 A가 B의 심각도가 동일
3	약간 중요	A가 B보다 약간 더 심각
5	중요	A가 B보다 꽤 더 심각
7	매우중요	A가 B보다 상당히 심각
9	극히 중요	A가 B보다 절대적으로 심각
2, 4, 6, 8	위 값들의 중간 값	필요시 사용
이상 척도 역수	B가 A보다 중요할 경우 사용	

또한 AHP 분석은 4단계를 통해 분석 가능한데 첫째, 최종 목표의 설정과 평가 요인들의 계층화이다. 이는 목표 달성과 관련된 평가 요인 선정 뒤 최상위 계층인 최종 목표와 1계층의 최종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인인 대항목 설정 및 2계층의 1계층 평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소항목을 설정해야 한다(최민철, 2020). 두 번째는 평가 요인들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하위계층이 n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 n(n-1)/2회의 쌍대 비교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 또는 가중치를 도출한다. 또한, 행렬의 대각 요소는 1의 값을 가지며, 이를 중심으로 역수조건(reciprocal property)의 형태를 취하는 정방행렬 A는 Eq. (1)과 같다. 그 후 각 열에 대한 값을 정규화·평균화시켜 목표에 대한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 열벡터를 곱하면 Eq. (2)와 같고, n×n의 입력행렬 A에 대하여 Eq. (3)을 만족하는 스칼라 r과 n×1의 고유벡터 ω가 존재하고, 고유벡터 ω의 가운데에서 ∑wj=1를 만족하는 고유벡터가 가중치(local weights)가 된다. 최종적으로 최종 요인 도출을 위해 평가대상의 종합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데 Eq. (4)와 같이 각 요소들의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화하여 전체 계층에 대한 하나의 복합 우선순위 벡터를 산출하여 최종 평가와 각 대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심현철·최경숙,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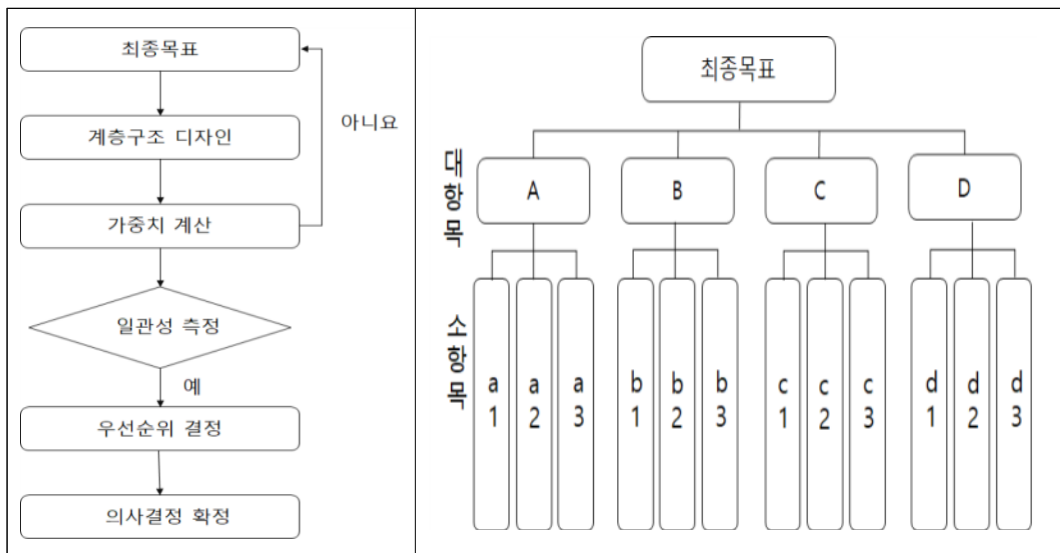
$$A = \begin{bmatrix} 1 & a_{12} & a_{13} & \dots & a_{1n} \\ a_{21} & 1 & a_{23} & \dots & a_{2n} \\ a_{31} & a_{32} & 1 & \dots & a_{3n}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a_{n1} & a_{n2} & a_{n3} & \dots & 1 \end{bmatrix} \text{ 여기서 } a_{ij} = \frac{1}{a_{ji}}, a_{ij} = 1, \forall i \quad (1)$$

$$A = \begin{bmatrix} 1 & a_{12} & a_{13} & \dots & a_{1n} \\ a_{21} & 1 & a_{23} & \dots & a_{2n} \\ a_{31} & a_{32} & 1 & \dots & a_{3n} \\ \dots & \dots & \dots & \dots & \dots \\ a_{n1} & a_{n2} & a_{n3} & \dots & 1 \end{bmatrix} \cdot \begin{bmatrix} w_1 \\ w_2 \\ w_3 \\ \dots \\ w_n \end{bmatrix} = \begin{bmatrix} nw_1 \\ nw_2 \\ nw_3 \\ \dots \\ nwn \end{bmatrix} \quad (2) \quad A \cdot w = r \cdot w \quad (3)$$

$$C[1, K] = \prod_{i=2}^k B_i \quad (4)$$

세 번째는 본 과정을 통한 AHP 분석 과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설문 응답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관성(consistency)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평가자의 일관성 있는 응답 성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김성희, 2019),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CR)은 0.1이하 일 경우, 일관성이 양호, 0.1 ~ 0.2의 경우 일관성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0.2 이상이면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한다(김종철·고영희, 2020; Saaty, 1980).

〈그림 1〉 AHP 분석 절차 및 계층구조 예시



Ⅲ. 연구설계

1. 분석적 계층화 과정

본 연구는 최종 목표인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산 관리 효율성 증대 방안 우선순위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효율성 증대 방안 우선순위 평가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행정자산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산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평가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1차 선정된 평가 영역과 요소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제를 하였으며, 오랜 경험이 있는 공유재산 관리 공무원, 도의원, 학계 교수진 등의 최종 의견을 통하여 설문 문항을 설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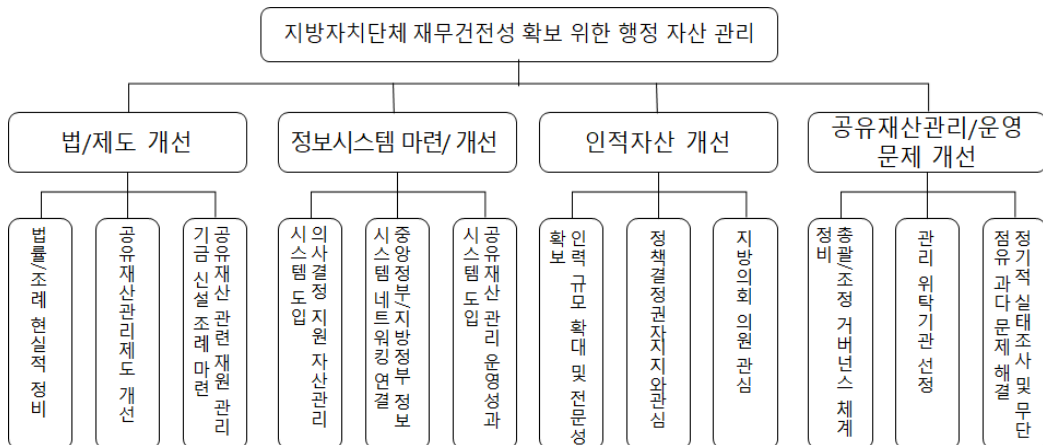
이 추진 과정을 거쳐 선정된 평가 요소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항목 정책 영역을 4개로 구분하여 상위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소항목 세부 내용을 12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최종 평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즉 1단계 대항목으로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마

련·개선, 인적자산, 공유재산 관리·운영 문제 개선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 요소를 선정하였다. 2단계 평가 요인으로 법·제도 개선은 법률·조례의 현실적 정비,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공유재산 관련 자원 관리기금 신설 조례 마련을 도출하였다. 둘째 정보시스템 마련·개선은 의사결정 지원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네트워크링 연결, 공유재산 관리 운영성과 시스템 도입을 도출하였고, 인적자산은 인력 규모 확대 및 전문성 확보, 정책결정권자 지지와 관심, 지방의회 의원 관심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운영 문제 개선 차원에서는 총괄조정 거버넌스 체계 정비, 관리위탁기관 선정 정기적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 과다문제 해결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평가 요소는 AHP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평가 요소들을 계층화하였으며, 쌍대비교를 통해 4가지 평가 요소 간 대안들의 우선순위 및 가중치를 결정하였고, 우선순위에 대한 일관성 측정을 거쳐 최종 대안을 선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 <그림 2>와 같다.

<표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산 관리 우선순위 도출 평가 요소

평가영역	평가요소	참고문헌
법·제도 개선	법률/조례 현실적 정비	고경훈(2015), 김성찬(2018), 김학수(2018), 전영길 외(2018), 차상휘(2017)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공유재산 관련 자원 관리기금 신설 조례 마련	
정보시스템 마련/개선	의사결정 지원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이삼주 외(2015), 이삼주·김성찬(2017), 정성호(2014)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네트워크링 연결	
	공유재산 관리 운영성과 시스템 도입	
인적자산 개선	인력 규모 확대 및 전문성 확보	라휘문(2020) 전영길·이무영(2020), 조임근(2018)
	정책결정권자 지지와 관심	
	지방의회 의원 관심	
공유재산관리/운영 문제 개선	총괄/조정 거버넌스 체계 정비	김성찬(2018), 남창우(2018), 이삼주 외(2017)
	관리위탁기관 선정	
	정기적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 과다문제 해결	

<그림 2> 평가 요인의 계층구조



2. 자료수집 및 기초현황 분석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2022년 11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약 26일간 공유재산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전·현직 공유재산 담당 근무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HP 분석 과정에서 계층분석 결과를 도출할 때는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집단적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본 수는 중요하지 않으나, 응답자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조사 대상자인 행정자산 및 공유재산 관련 각 영역별 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이에 조사 대상자인 행정자산 관련 각 영역별 전문가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행정자산 관련 산·학·연 전문가 리스트를 선정하고, 둘째 관련 분야 경력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설문 응답자의 전문성과 구성의 중요성으로 조직, 업무경력, 학력 등 총 3가지를 고려하여 19명을 설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조사지만 평가 항목만 제시할 경우 조사 대상자가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해 사전에 각 평가 요인별 설명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설문 방식은 AHP 분석에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문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 방식, 평가 방법, 평가 항목 등을 사전 설명하였고, AHP 평가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의 중요도 분석은 같은 수준에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해 쌍대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하였다.

〈표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산 관리 우선순위 도출 평가 AHP 쌍대 비교(예시)

지방자치단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지방자치단체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																		정보시스템 마련·개선
법·제도 개선																		인적자산 개선
법·제도 개선																		공유재산관리/운영 문제 개선

또한, 설문 분석을 위해 AHP 기법을 사용하여 각 평가 항목 간 중요도를 분석하였고 설문 응답자가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자의 논리성을 검토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Saaty(1977; 1980)의 고유값(Eigenvalue)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결정 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에 활용된 프로그램은 R 3.4.2(RStudio 1.1.383)와 Excel 2016을 사용하였다. 계층분석 과정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과정에 집단이 참여하는 경우 집단적 동의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개인별로 평가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응답에 대해 기하평균(geometric me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Saaty, 1986).

IV. 분석결과

1. 기초 현황 분석

본 연구 설문 응답자의 일반현황은 보면 업무 분야의 경우, 학계 26.3%, 연구기관 26.3%, 전·현직 공유재산 담당 근무자 47.4%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는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의 중요도가 높아 관련 경험자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비중(79%)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표 5 참조).

〈표 5〉 설문조사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항목	척도	빈도	%	항목	척도	빈도	%
성별	남성	15	78.9%	업무 경력	5년 이하	1	5.2%
	여성	4	21.1%		10년 이하	4	21%
나이	30대	3	15.8%		15년 이하	6	31.6%
	40대	8	42.1%		20년 이하	7	37%
	50대 이상	8	42.1%		21년 이상	1	5.2%
조직	학계	5	26.3%	학력	학사	6	31.6%
	연구기관	5	26.3%		석사	2	10.4%
	전/현직공무원	9	47.4%		박사	11	58%

2. 분석결과

본 연구는 AHP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자의 측정 항목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Satty(1980)의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사용하였고, 기준값은 0.1 이하일 때 충분히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Saaty, 198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위기준(CR=0.0023)과 하위기준(법·제도 개선=0.0879, 정보시스템 마련·개선=0.0197, 인적자산 개선=0.0285, 공유재산관리·운영 문제 개선=0.0307)의 모든 CR값은 전부 0.1 이하로 나타나 설문조사의 일관성은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1) 평가 항목의 중요도 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산 관리 효율성 증대 방안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 항목으로 설정한 4개의 상위항목에 대한 AHP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상위항목 간 중요도와 순위를 분석한 결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자산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한 항목은 공유재산 관리·운영 문제 개선이 가장 높았으며(0.303), 법·제도 개선(0.263), 인적자산(0.218), 정보시스템 마련·개선(0.216)의 순이었다.

〈표 6〉 상위 항목간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요소	중요도	순위	CR
법·제도 개선	0.263	2	0.0023
정보시스템 마련·개선	0.216	4	
인적자산 개선	0.218	3	
공유재산관리/운영 문제 개선	0.303	1	

위의 1단계 4개 평가 요소에 대한 각 하위항목 간 쌍대 비교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법·제도 개선 평가 요소의 순위를 분석한 결과 공유재산 관련 재원 관리기금 신설 조례 마련(0.469), 법률/조례 현실적 정비(0.290),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0.241) 순이었다. 정보시스템 마련·개선의 중요도는 공유재산 관리 운영 성과 시스템 도입(0.516),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네트워킹 연결(0.329), 의사결정 지원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0.155) 순이었으며, 인적자산 개선의 중요도는 인력 규모 확대 및 전문성 확보(0.446), 정책결정권자 지지와 관심(0.322), 지방의회 의원 관심(0.232)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운영 문제 개선의 중요도 순은 정기적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 과다 문제 해결(0.366), 관리위탁기관 선정(0.365), 총괄/조정 거버넌스 체계 정비(0.269) 순이었다.

〈표 7〉 법·제도 개선의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요소	중요도	순위	CR
법률/조례 현실적 정비	0.290	2	0.0879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0.241	3	
공유재산 관련 재원 관리기금 신설 조례 마련	0.469	1	

〈표 8〉 정보시스템 마련·개선의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요소	중요도	순위	CR
의사결정 지원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0.155	3	0.0197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네트워킹 연결	0.329	2	
공유재산 관리 운영 성과 시스템 도입	0.516	1	

〈표 9〉 인적자산 개선의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요소	중요도	순위	CR
인력규모 확대 및 전문성 확보	0.446	1	0.0285
정책결정권자 지지와 관심	0.322	2	
지방의회 의원 관심	0.232	3	

〈표 10〉 공유재산관리·운영 문제 개선의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요소	중요도	순위	CR
총괄/조정 거버넌스 체계 정비	0.269	3	0.0307
관리위탁기관 선정	0.365	2	
정기적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 과다 문제 해결	0.36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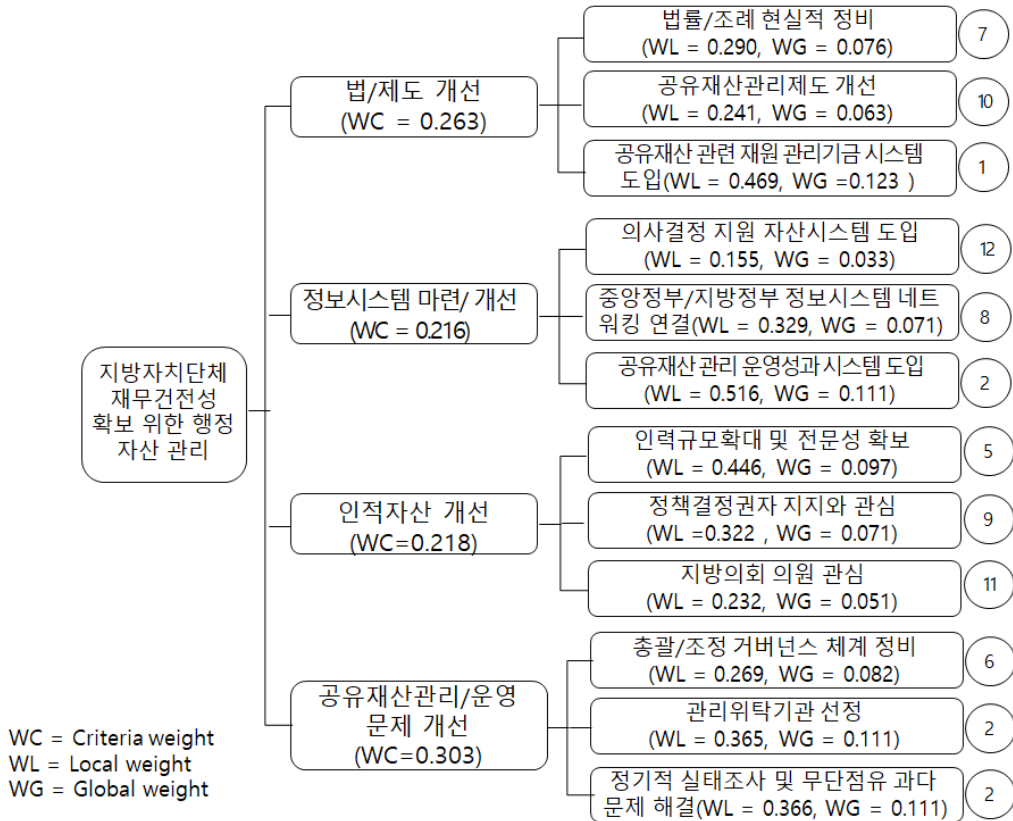
2) 전체 중요도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재산 관리 효율성 증대방안 최하위 평가 요소의 전체 중요도는 평가 요소의 상위항목과 하위항목 중요도의 곱으로 산출되는 복합 가중치로서 판단할 수 있다(김종철·고영희, 2020; Saaty, 1980). 본 연구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는 〈표 11〉,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재원 관리기금 신설 조례 마련(0.123), 공유재산 관리 운영성과 시스템 도입(0.111), 정기적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 과다 문제 해결(0.111), 관리위탁기관 선정(0.111), 인력 규모 확대 및 전문성 확보(0.097) 등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전담기구 확대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과는 우선 순위에서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1〉 행정자산 관리 효율성 증대방안 하위기준 종합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상위기준	상대적 중요도(WC)	하위기준	상대적 중요도(WL)	종합 상대적 중요도(WC*WL)	우선 순위
법·제도 개선	0.263	법률/조례 현실적 정비	0.290	0.076	7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	0.241	0.063	10
		공유재산 관련 재원 관리기금 신설 조례 마련	0.469	0.123	1
정보 시스템 마련·개선	0.216	의사결정 지원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	0.155	0.033	12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0.329	0.071	8
		공유재산 관리 운영성과 시스템 도입	0.516	0.111	2
인적자산 개선	0.218	인력 규모 확대 및 전문성 확보	0.446	0.097	5
		정책결정권자 지지와 관심	0.322	0.070	9
		지방의회 의원 관심	0.232	0.051	11
공유재산 관리/운영문제 개선	0.303	총괄/조정 거버넌스 체계 정비	0.269	0.082	6
		관리위탁기관 선정	0.365	0.111	2
		정기적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 과다 문제 해결	0.366	0.111	2

〈그림 3〉 지방자치단체 재무건전성 향상 위한 행정자산 관리 과제 상재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



본 연구 분석 결과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자산의 관리·운영을 통한 수익 확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실태 파악과 관리체계 등이 제일 중요하며, 법과 제도를 통해 행정자산 관리를 위한 현실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체계와 정보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4가지 범주에 맞춰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 법률과 조례는 현실을 반영하든 반영하지 못하든 현재는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유재산과 행정자산의 관리에 대한 기금 마련을 위한 기본적 근거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맞춘 법률과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 또한, 정보시스템 또한 실태조사에 따른 성과시스템을 관리하고 환류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연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순차적 업무 추진 과정 순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인적자산 측면에서는 행정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 배출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행정자산의 수익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의 경우 일반 영역이 아닌 전문적 영역의 업무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배치 및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현재까지 실태 파악이 안되는 행정자산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V.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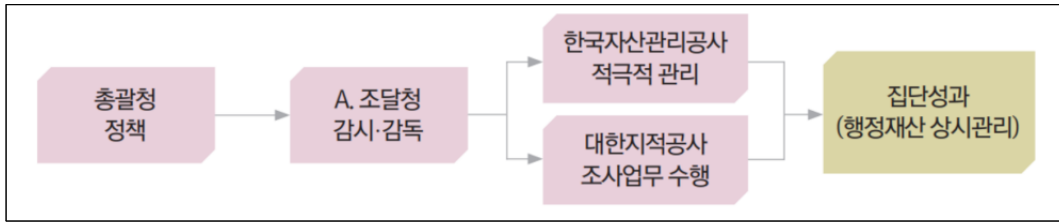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존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완하고 변화되는 중앙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유재산과 행정자산 관리 및 효과적 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단편적인 연구가 아닌 기존 선행연구와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평가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행정자산의 학계, 연구기관, 전·현직 공유재산 담당 근무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 방안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문가들은 건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운영 문제 개선 > 법·제도 개선 > 인적자산 개선 > 정보시스템 마련·개선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서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인식이 동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공유재산의 관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공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단계 평가 항목 내의 2단계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 관련 재원 관리기금 신설 조례 마련, 공유재산 관리 운영성과 시스템 도입, 인력 규모 확대 및 전문성 확보, 정기적 실태조사 및 무단 점유 과다 문제 해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합 가중치를 적용해도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자산의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관리기금 신설을 위한 기반 마련과 기존 미흡한 공유재산 관리 운영성과 시스템 도입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최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산의 관리와 운영을 통한 수익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산은 전문성을 포함한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지적공사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과 같은 상시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관리기금 및 관리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중앙정부 행정재산 상시관리 체계



둘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시 행정재산의 정기적 실태조사와 무단 점유에 대한 대책 및 운영 성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성과 극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은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하여 본 연구 대상의 지방자치단체 경우처럼 몇 명 또는 한 개 팀 등이 추진할 수 없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통한 수익 확보와 그에 따른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와 조직을 통합하여 장기적 운영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대적 요인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 도출을 위해 각 평가 요인을 세분화하여 독립적인 차별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보인다. 첫째, 본 연구는 19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향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연계성을 확인하고 모색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다. 정책의 특성상 현안을 중심으로 한 인식의 중요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론적 논의 및 검증의 차원에서는 미흡한 것이 있다고 보여진다.

셋째,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 요소 도출을 위해 기존 선행 연구 뿐만 아니라 전·현직 공유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활용하였으나, 현재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 실무적 차원의 평가 요소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문가 집단 구성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재무건전성 관련 주체로서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현직 공무원과 연구 집단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세심한 분류가 내포하고 있는 차별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평가 요소 도출을 위해 기존 선행 연구 뿐만 아니라 전·현직 공유재산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활용하였으나, 현재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 실무적 차원의 평가 요소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자산 관리에 있어 공급자 측면에서의 한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상의 한계도 있다.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 정책 평가항목의 도출을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이와 병행하여 델(Delphi) 기법이나 인터뷰, 심층토론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좀 더 풍부한 연구결과 도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HP 분석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네트워크분석과정(Analytic Network Process: ANP)을 활용하거나 그 외 다른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단편적인 차원의 연구가 아닌 다양한 평가 항목을 선정하여 쌍대비교함으로써 중요한 평가 요소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추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항목, 남창우. (2019). 「공유재산의 관리실태와 효율적 개선방안」, 2019년도 한국도시행정학회. 고경훈. (2015). 공유재산관리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6(1): 1-26.
- 박태열. (2013). 경상남도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정책포커스」. 12: 1-34.
- 김병욱. (2015). 「의사결정계층 (AHP)분석 방법」, 서울: 김스정보전략연구소.
- 김성찬. (2017).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141-166.
- 김성찬. (2018). 「재정부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책임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종갑. (2015). 「공유재산 제도변화의 성과와 제도적 개선방안」,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종철, 고영희. (202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요인 우선순위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인식차이 연구. 「Korea Business Review」. 24(3): 105-124.
- 김학수, 서충원(2018). 공유재산 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공유재산 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집합건물법학」. 27: 45-76.
- 남창우. (2018). 공유재산의 위탁개발 효율성 제고 방안. 「지방재정」. 5: 26-35.
- 남창우, 강항목(2019). 지방정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 경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4): 27-58.
- 라휘문. (2020).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조직의 재설계. 「한국정책연구」. 20(1): 75-95.
- 류춘호. (2010).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유재산 관리의 정책적 의미」,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 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43-271.

- 박우서, 고석찬, 박경원(1996). 국유잡종재산의 관리 및 운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1(5); 47-63.
- 심현철, 최경숙(2017). 기능저하 저수지 선정을 위한 다기준 의사결정기법 적용성 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59(3); 11-19.
- 안정임, 김양은, 전경란, 최진호(2018). 지능정보사회 미디어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우선순위 인식 연구; 계층분석과정(AHP)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2); 7-40.
- 여효성, 김봉균. (2019).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관리방안 : 충청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행정학회 하반기 학술발표대회, 323-349.
- 이삼주, 김성주. (2015).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지방재정발전세미나 발표논문집,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삼주, 김성주. (2015).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삼주, 김성찬. (2017). 「공유재산 위탁개발 공정성 제고 방안」,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01-425.
- 장현영, 노시평. (2003). 지방정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7(3); 270-291.
- 전영길, 이무영, 김소은, 김세민. (2017). 「경기도 행정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용 효율성 증대 방안 수정」, 경기도의회
- 전영길, 이무영. (2020). 공유재산 운영성과 증진을 위한 관리전담부서 설립에 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1); 11-21.
- 정성호. (201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대안. 「정부회계연구」, 12(2); 89-107.
- 조근태, 조용근, 강현수(200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사.
- 조임근. (2018). 「강남구 공유재산 관리실태 분석 및 활용도 제고방안」, 한국지방세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3-94.
- 차상휘. (2017). 효율적 지방재정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률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8(2); 31-52.
- 최민철. (2020). AHP 분석의 문제점과 수정가중치모형의 개발. 「경영과 정보연구」, 39(2); 145-162.
- 행정안전부. (2022). 공유재산업무편람.
- Saaty, T. L. (1977). A scaling method for priorities in hierarchical structure.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15(3); 234-281.
- Saa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Vargas, L. G.(1990), "An Overview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Its Application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48(1); 2-8.
- Zeleny, M. (1982). An Essay into a Philosophy of MCDM : A Way of Thinking or Another Algorithm. Computers and Operations Research, 19(7); 563-566.

이창원(李昌原), 박사(경영학박사, 2004, 전북대학교, 신제품 평가에 대한 창의적 사고 과정의 효과)

- 소 속 : 우석대학교, 창업교육지원센터장,
- 관심분야 : 전략/신기술/정책개발,
- 저 술 : 드론기초와 촬영 길라잡이
- 발표논문 : 스포츠팀 성과 향상을 위한 팀 지도자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중국 프랜차이즈 지식전달시스템 경영과 거래관계 만족, 프랜차이즈 성과 관계에 관한 연구, 공공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보완재로서의 메타버스의 기능 보완에 관한 연구
- 주요경력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기획감사팀장, 전라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전주시의회 인사위원 등
- 메일주소 : peterfanland@naver.com

Abstract

A Study on the Administrative Property Management to Improve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Lee, Chang-Won

In recent times, the increasing demand for welfare services, the expansion of employment services, and the stimulation of local economies have led to an increased role for local government entities. As a result, there is a growing need to enhance the traditionally low fiscal self-reliance of these local government entities. This study, based on previous research, conducte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analysis involving experts in public assets, including academics, research institutions, and current or former public officials. The research findings Enactment of ordinances establishing fund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public assets (0.123), Introduction of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assets (0.111), Regular assessment and resolution of issues related to unauthorized occupancy (0.111), Selection of management outsourcing agencies (0.111), Expansion of personnel and acquisition of expertise (0.097).

Key Words: Administrative property, Public property,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AHP analysis, Multicriteria decision-making

